

# 오피니언

## 금남로에서

신항락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은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상대 차량의 과속 운전과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탓에 가슴을 잔뜩 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유턴은 물론 신호를 무시한 채 내달리는 차량도 비일비재하다. 더러, 운전이 서투른 여성들은 창문을 내리고 초아블이는 다혈질 운전자들의 '육두문자'도 감내해야 한다.

보행자들은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일쑤고,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가 설치돼 있지만 마치 허를 경주를 하듯 넘나드는 건 예사다. 도로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흐름을 끊고, 사고를 유발하는 장애물인데도 당국의 눈에 한낱 구경거리일 뿐이다.

### 교통 무질서 '3관왕' 오명

열악한 도로 사정과 부족한 안전시설도 문제다. 요철과 골짜기 심한 도로는 물론이고,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정지선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교통 인프라도 여전하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후진적인 교통의식,

교통 인프라가 '무질서의 천국'을 낳고 있는 셈이다. 광주가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사망사고 1위, 음주사고 1위' 등 불법에 '3관왕'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통계만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

## 광주사람들 올해 이것만은...

당 22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 16개 시·도 중 단연 최고였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도 579건으로 1위였다.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년에 비해 4.89%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4.13%), 부상자 수(8.20%)도 크게 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도 전국 최고다. 광주의 자동차 1만대 당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의 13.4건보다 무려 1.5배나 높다. 차차구별로도 서구 26.9건, 북구·광산구 20.0건, 동구 18.8건, 남구 17.5건 등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교통사고 및 음주사고 발생률과 정비례하는 교통 사망사고역시 예외일 순 없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고치이자 평균의 1.7명보다 훨씬 높다.

외지인들은 "광주사람들을 약자스럽다"고들 한다. 학부모의 약자같은 교육열이 '실력 광주'를 키웠고, 끼가 살아나는 문화·예술하며, 맛깔 나는 음식문화 또한 그 '약자'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 5월 민중항쟁은 약자의 진수다. 반민주·반독재에 맞선 5·18 항거는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담

보로 한, 타올에 맞선 자유의 몸부림이었다. 우리가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표방하는 것도 그 숭고한 정신에 있다.

맛과 예술, 교육, 민주화는 질서와 께 어있는 의식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광주가 가장 기초적인 교통질서조차 엉망이라는 게 아닐까 아닌가. 그것도 3관왕씩이나.

난폭·음주운전은 그 위험에서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케 한다는 점에서 고의적 살상행위다. 그 피해도 당

사자의 사회적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운전자를 자극해 '대응 난폭운전'도 유발한다. 전체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과속과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난폭·음주운전 때문이라는 게 이를 말해준다.

운전자들에게 도로를 달리는 자체가 '공포'나 다름없는 일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주요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다. 보행자를 피하려다 내는 사고도 부지기수다.

### 질서는 민주시민의 척도

광주가 3년 이상 교통 무질서의 오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나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거나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지적정서 탓이 크다. 3년 전부터 경찰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단체가 나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광주사람들, 운전대만 잡으면 왜 달리는가. 그건 약자 같은 삶이 아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습관이자 만용일 뿐이다. 그 어떠한 가치도 생사에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여유를 갖고 차분히 운전을 즐기자. 손에 권 것을 놓지 않고서는 악수를 나눌 수 없질 않겠는가. 교통질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질척이기도 하다. <논설주간>hshin@kwangju.co.kr

## 시설

### 지자체 관광사업 국고지원 방식 개선해야

전남지역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차질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에 비례해 지자체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9개 시·군이 올해 19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외에 자부담 예산 87억 99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목포시는 노벨평화상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해 올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자부담 30억 원 가운데 15억 원만 확보한 상황이라서 국비를 못받았고 있다.

목포시는 모두 5건, 47억5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형편상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나주, 곡성, 신안, 무안, 구례, 함평, 장흥 등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자체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이미 확정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은 소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분담 사업'이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전남도가 이의 개선을 요구했었으나 아직껏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전남지역 시·군의 재정상태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10%대이고,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곳이 많다. 여기에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정부는 우선 매칭 펀드 방식을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지방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이미 확보된 국비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아차 불법 '도가니' 과연 글로벌 기업인가

기아차 광주공장이 임금 체불과 근로 시간 초과 등 각종 법 위반에다 근로 여건도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특성과도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유명세가 무색할 지경이다.

기아차는 현장실습생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천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등 15억8천9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 범죄인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또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했으며,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고용허가 없이 일했다.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기아차는 이밖에 산업재해 미보고 등 산업안전법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조치 미흡 등 근로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서법을 위반한 셈이다.

실습생의 고혈을 빨고, 근로시간마저 위반하면서 미성년자를 부려먹는 게 세계적 기아차의 유명세가 무색할 지경이다. 기아차는 현장실습생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천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등 15억8천9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 범죄인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또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했으며,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없이 고용허가 없이 일했다.

이 대화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진짜 그랬을까. 사실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대통령도 투표에 의해 뽑혔을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주었다.

이 대화는 전제군주와 군부 독재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 등을 별다른 의심 없이 '왕과 대통령으로 섬겨' 오던 국민들의 심경에 종대한 변화를 불러왔고, '권위의 종언(終焉)'을 촉발했다.

집과 학교와 직장 등에서 부모와 교사와 경영주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인은 물론 경찰과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최근엔 국민의 삶과 정의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관세에 대한 심판이 '석궁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는 중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우리나라에서 권위는 사회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권위의 종언을 맞은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 은펜칼럼



이병우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영화 '파왕벌'에서 경구 선생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만이 경구를 한다."라고 하고, 단전 호흡 전문가가 "사람만이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노릇은 대통령이 노인정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부모를 섬기기 때문이다"고 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정인사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슬 먹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 지속가능한 슬픈의 3가지 조건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만이 슬을 마신다고 할 수는 없다. 슬을 처음 마신 동물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었다는 설이 있고 실제로 슬 마시기를 좋아하는 동물들도 있다. 하지만 직접 슬을 만들어서 마시는 동물은 사람이 유일하다. 그래서였는지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위고는 "신은 물을 만들었고, 인간은 슬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결과품인 슬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마실 수 있으려면 지속 가능한 슬꾼이 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에서도 지속가능이 중요하듯 주당에게도 지속가능은 매우 중요하다. 한 때의 폭음으로 건강을 해쳐 나이가 들어서 슬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슬꾼의 자세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슬꾼이 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사회적인 조건이다. 주도를 잘 지켜야 한다. 음주의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시켜주는 기능이다. 사람들은 식사 도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술과 비즈니스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술은 잘 사용하면 소통주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추태주가 된다. 특히 남녀가 같이 있을 경우 사고를 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둘째, 생태적인 조건이다.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마셔야 한다. 폭음을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니다. 적당한 마시면 술만큼 건강에 좋은 것도 없다. 술과 건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가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장수자의 91.3%가 '매일' 또는 '때때로' 음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 기고



김원숙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인류평화와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고, 안으로는 어느 민족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영이나 지역패권 야욕을 부린 적이 없고, 오히려 식민지 지배, 전쟁과 분단을 겪어 경제개발과 민주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을 신뢰·동반할 수 있는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인권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광주시와 녹색의 땅 전남지역에는 다양한 꿈을 지니고 세계 각국에서 온 3만 8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완도군 금일면에도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15쌍

###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광주의 꿈

의 결혼이민자 가정의 삶이 밝아졌다.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서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개발과 시행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철학과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8·15해방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입국 억제와 환영유치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력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인력 및 인력의 유치와 단순기능인력의 입국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칙은 참여정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법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둘째, 1993년 이후 산업연수생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외국인 인권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문민정부는 산업연수생에게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각종 조치를 하고,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인권침해와 차별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산업연수생의 법적지위와 실체의 불일치에서 야기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부터 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국가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문제가 화두로 제기되었다.

셋째, 참여정부시대는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즉, 참여정부의 이민정책은 그동안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과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부처별로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그쳤던 것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종래의 단순한 질서유지 차

원의 출입국관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화를 포용하고 외국인들을 배려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문명사회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나 헌법의 기본원리 등과 문화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서구 여러 나라에서 정립된 다문화주의라든가, 동화주의 등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위력 있는 개념으로 보아 사회통합정책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녹색의 땅 전남의 도서 벽지에서 출발한 남도인들이 빛고를 광주에 모여 무등산을 바라보며 민주와 인권과 평화의 도시를 이루어 보자는 인류보편의 꿈이 이제 이 고장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 소외와 배제의 차별의 벽을 넘어 소통과 배려의 공존의 세상을 마련할 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광주의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법무부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지방세 체납 징수 민간 위탁 검토해 보길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납세는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 아비한 사람들이 있다. 월급이래야 겨우 200만 원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정년퇴직 할 때까지 1원 한푼까지 철저히 세금을 납부하는데 총 재산이 몇십억, 몇백 억씩 되는 부자들이 세금을 교묘히 안내거나 빼먹는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

오죽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받아내기 위해 세금징수 특별팀까지 꾸려서 활동하고 거기가 제대로 받아낸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준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이 수억 대지만 부인 명의로 돌려받거나, 혹은 돈은 있으면서 요리조리 피혜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형태로 빚까지 지게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곤궁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과렴치한 납세자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벌칙과 제재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38세금기동대라는걸 만들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한 금액만 404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손뼉쳐줄 만하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

가지겠지만 지방채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는 민간에 맡겨보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모델 삼아 보자.

이걸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가혹한 채권추심과 지나친 빚 독촉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진배없다.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 無等鼓

"이즘 가면 막가자는 거죠." 지난 2003년 9월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렸던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광경사 간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너무도 유명한 이 말은 검찰인사와 관련해 토론이 벌어지던 중 한 광경사가 "정치인이 인사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한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뇌물사건을 잘 봐달라고 했다는 데 검찰의 중립을 훼손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나."라고 묻는 데 대한 노 대통령의 답변이다.

대통령은 "결코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라고

늘렸다. 이 대화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진짜 그랬을까. 사실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대통령도 투표에 의해 뽑혔을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해주었다.

이 대화는 전제군주와 군부 독재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 등을 별다른 의심 없이 '왕과 대통령으로 섬겨' 오던 국민들의 심경에 종대한 변화를 불러왔고, '권위의 종언(終焉)'을 촉발했다.

집과 학교와 직장 등에서 부모와 교사와 경영주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인은 물론 경찰과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최근엔 국민의 삶과 정의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관세에 대한 심판이 '석궁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는 중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우리나라에서 권위는 사회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권위의 종언을 맞은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李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2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신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